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위한 고령화 대응방안 워크숍

- 일 시 : 2018. 10. 8(월) 14:0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위한 고령화 대응방안 워크숍

①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복지정책의 현주소 진단을 통해 민선 7기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도 및 시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민선7기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타개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②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14:00 - 17:00
-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최 : 충남연구원
- 참석대상 :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및 도·시·군 공무원, 노인복지 전문가 등

③ 진행흐름

사회 : 김종화(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순서	시간	내용	
등록	13:40-14:00(20)	등 록	
개회	14:00-14:20(20)	개회사 : 윤 황 (충남연구원장) 축 사 : 고일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발제	14:20-17:00	[워크숍 발표 및 토론] 좌장 : 김희경(공주대학교 교수)	
	14:20-14:40(20)	발제1.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14:40-15:00(20)	발제2. 충남도 독거노인 돌봄 방안	김용현(충남연구원)
토론	15:00-15:30(30)	[지정토론] 고일환(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민진암(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5:30-16:00(30)	[종합토론]	
폐회	16:00-16:10(10)	[폐회]	



목 차



I.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4

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II. 충남도 독거노인 돌봄 방안 23

김용현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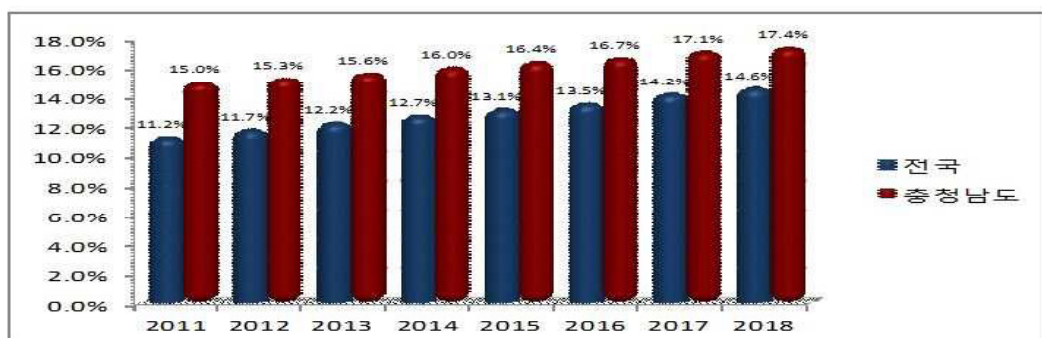
지은정



1. 인구학적 특성

- 충남의 노인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4.6%)보다 높음(2.8%p).
- : 17개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고령화가 심각함 (전남: 21.8%, 세종 9.3%)

[그림 1] 인구고령화 비율(전국 vs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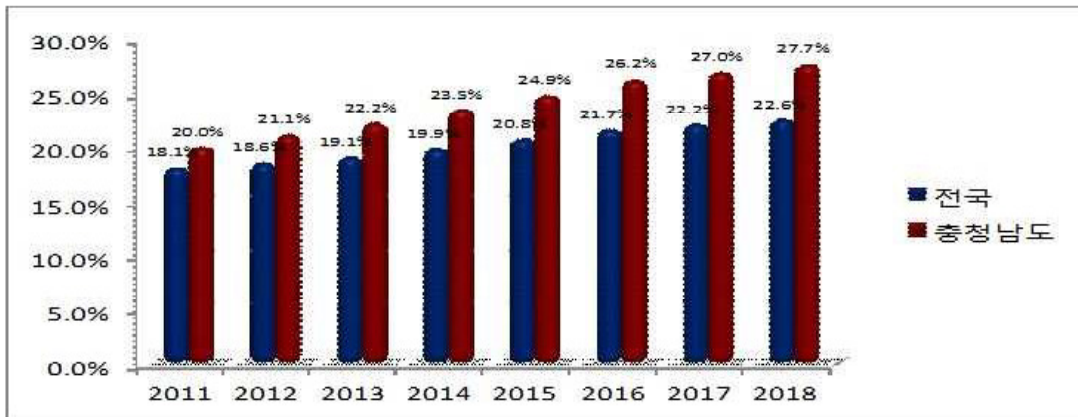
주) 2018년은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현황, 최종접속일 2018.09.22)



1. 인구학적 특성

- **충남의 후기고령노인의 비율도 전국보다 높음.**
: 80세 이상 노인비율 전국 22.6% vs 충남 27.7%

[그림 2] 후기노인의 비율(전국 vs 충남)



주) 2018년은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현황, 최종접속일 2018.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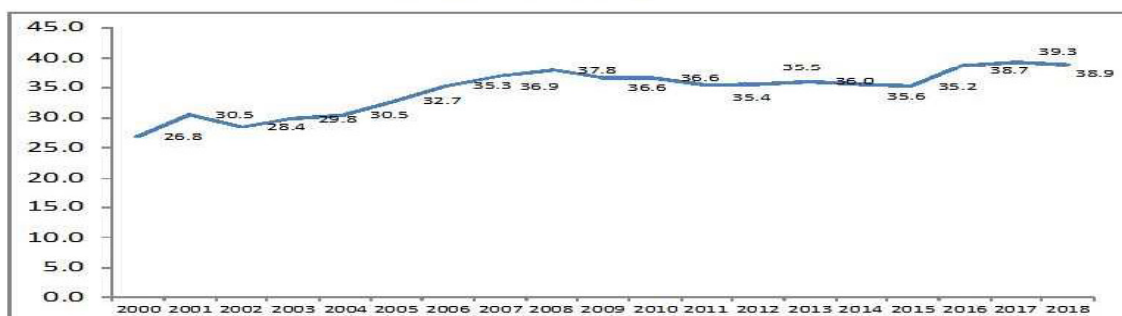
3



2.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지출비율

- **재정자립도**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음.
(2000년: 26.8 vs 2018년: 38.9)
: 그러나 지자체 가운데 12위로 상대적으로 낮음.
(서울: 84.3, 전남: 26.4)

[그림 6]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2000~2018년)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시도별 재정자립도, 최종접속일 2018.09.27).

4



2.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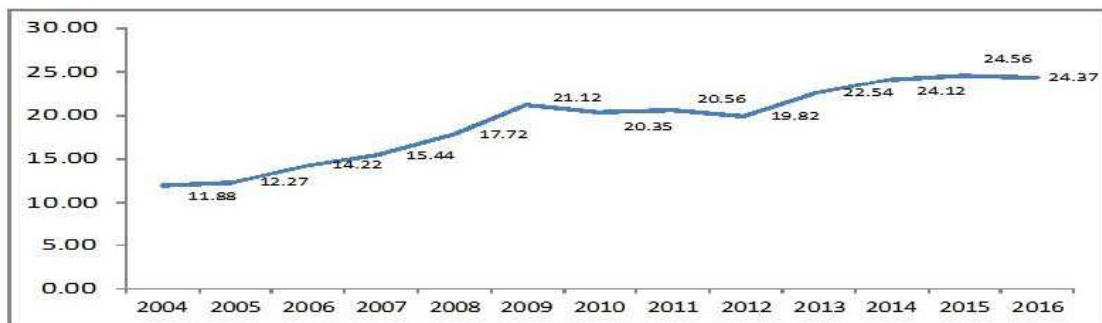
● 사회복지예산

: 충남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은 24.37%로 2004년 대비 2.1배 증가함.

: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12위로 낮은 편임.

(1위: 광주 45.4%, 2위: 대전 41.1%)

[그림 6]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2004~2016년)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시도별 사회복지예산, 최종접속일 2018.09.2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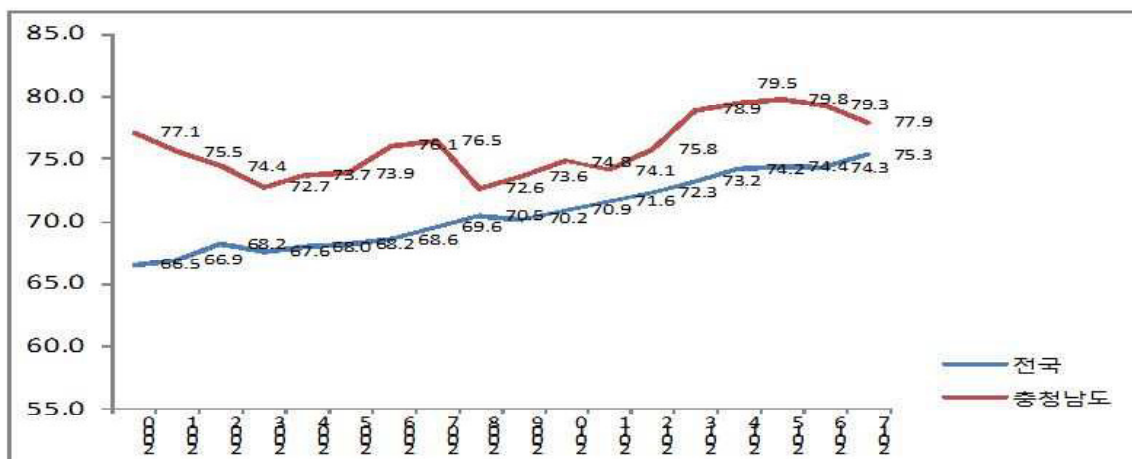


3. 고령자 고용률

● 충남의 고령자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음.

: 50대 고용률 전국 75.3% vs 충남 77.9%

[그림 3] 50~59세의 고용율(전국 vs 충남)



자료) 통계청 KOSIS을 바탕으로 작성함(경제활동인구, 최종접속일 2018.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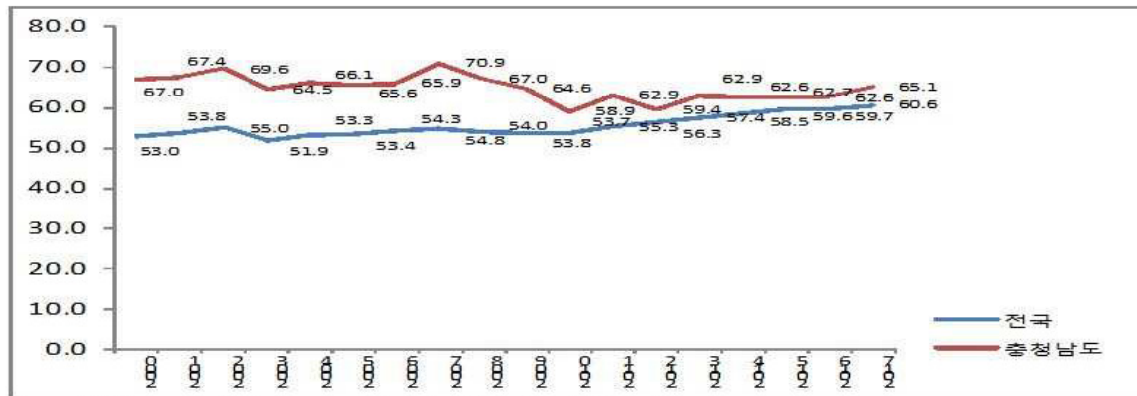
6



3. 고령자 고용률

- 60~64세 고령자의 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음.
: 60~64세 고용률 전국 60.6% vs 충남 65.1%
: 다만, 전국 추세와는 달리 충남은 2000년보다 낮아짐.

[그림 3] 60~64세의 고용율(전국 vs 충남)



자료) 통계청 KOSIS을 바탕으로 작성함(경제활동인구, 최종접속일 2018.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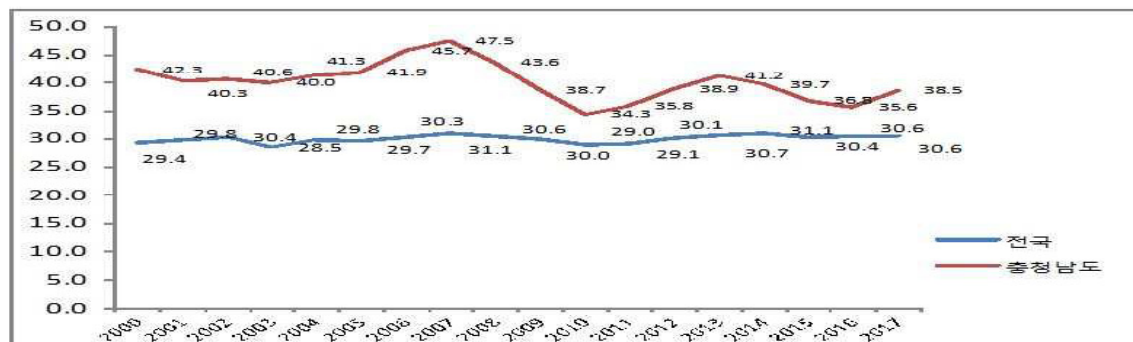
7



3. 고령자 고용률

- 전국 평균과 충남의 65세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더 큼.
: 65세 이상 고용률 전국 30.6% vs 충남 38.5%
: 충남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4번째로 노인고용률이 높음
(전남 48.5%, 경기도·부산 24.5%)

[그림 5] 65세 이상의 고용율(전국 vs 충남)



자료) 통계청 KOSIS을 바탕으로 작성함(경제활동인구, 최종접속일 2018.09.26).

8



4. 노인의 소득실태

● 소득분포

- : 충남의 소득 1분위 저소득자의 비율이 63.6%로 높음.
- : 17개 지자체 가운데 7번째로 높음
(전남이 71.2%로 가장 높고 울산이 46.9%로 가장 낮음)
- : 반면, 소득 5분위 고소득자의 비율은 3.0%에 불과함.
- : 충남 노인의 저소득자 비율이 높고 소득이 상당히 양극화된 것을 알 수 있음.

[표] 전국 시도별 노인의 소득분포

(단위: %, 명)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
전국	58.3	18.4	10.7	7.3	5.3	7,075,518
충남	63.6	18.6	7.7	7.1	3.0	350,909

주) 1)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함.

2) 소득결측치를 제외한 비율임.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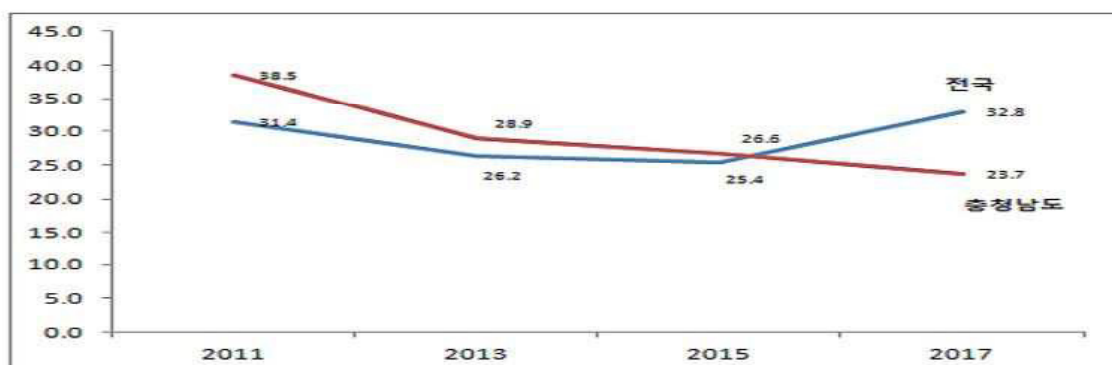


4. 노인의 소득실태

● 소득만족도

- : 충남 도민의 소득만족도는 2011년에는 38.5%로 높았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7%로 낮아짐.
- :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다름.

[그림 7] 전국과 충청남도의 소득만족도(2011~2017년)



주) 1) 소득이 있는 사람만 조사함.

2)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의 비율을 합함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최종접속일 2018.09.2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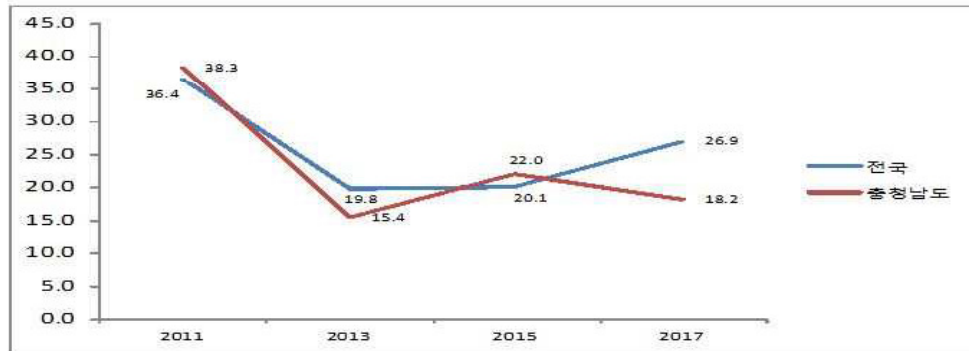


4. 노인의 소득실태

● 주관적 소득수준

- : 충남도민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수준은 (매우)여유로움은 18.2%에 불과함. 전국 평균(26.9%)보다도 낮음.
- : 그나마도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짐(2011년 38.3%).

[그림 8] 전국과 충청남도의 주관적 소득수준(2011~2017년)



주) (매우) 여유있음의 합임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최종접속일 2018.09.2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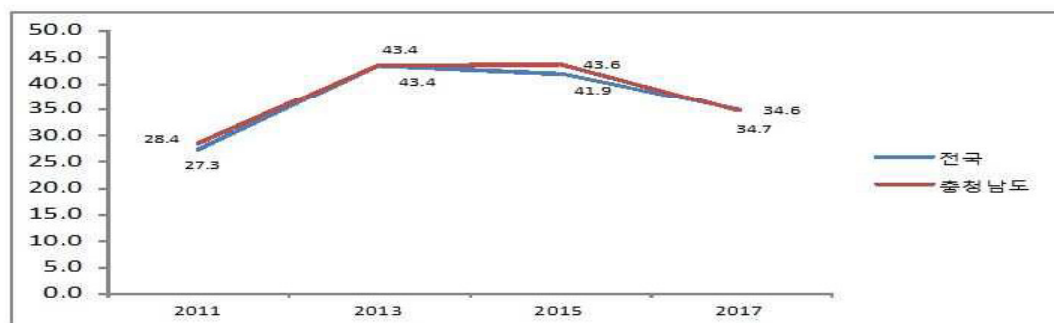


4. 노인의 소득실태

● 주관적 소득수준

- : 충남도민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수준은 (매우)부족하다는 비율은 34.6%임.
- : 최근으로 올수록 자신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아짐.

[그림 9] 전국과 충청남도의 주관적 소득수준(2011~2017년)



주) (매우) 모자라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최종접속일 2018.09.27).

12



4. 노인의 소득실태

● 충남 노인의 소득원별 금액

- : 충남노인의 소득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11위로 낮음.
- : 더구나 고용률은 높는데, 근로소득은 낮음.
- :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열악한 것을 말해줌.

[표] 전국 시도별 노인의 소득원별 금액(연 평균)

(단위: 만원)

구분	근로·사업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 소득	합	순위
전국	1224.5	224.1	407.8	710.4	22.6	2589.3	-
충남	1057.5	102.5	413.1	676.8	27.1	2276.9	11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13



4. 노인의 소득실태

● 충남 노인의 소득원별 비중

- : 충남노인의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이 37.3%로 가장 높음.
- : 근로사업소득 31%, 공적이전소득 26.4%의 순임.
- :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 소득원의 1/4에 불과함.

[표] 전국 시도별 노인의 소득원별 비중

(단위: %)

구분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합
전국	32.33	6.98	24.13	35.93	.62	100
충남	30.97	4.26	26.44	37.32	1.01	100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14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직종

: 충남 노인취업자의 직종은 농림어업직(66%)과 단순노무직(25.7%)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국 비율보다(73.1%) 18.6%p 높음.

: 반면,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은 0.4%에 불과함(전국 4.8%).

: 전국보다 노인고용률이 높지만 노동의 질이 낮은 농림어업·단순직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전국 시도별 취업률 및 취업노인의 직종

(단위: %, 명)

구분	취업자	취업자 직종									
		전문·관리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2,143,524	103,753	4.8	231,622	10.8	241,670	11.3	706,926	33.0	859,553	40.1
충남	154,750	619	.4	4,654	3.0	7,574	4.9	102,170	66.0	39,732	25.7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15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율

: 전국의 일하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과 고용주는 6.9%에 불과함.

[표] 일하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율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	
	인원	비율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인원	비율
전국	2,143,524	30.3	5.6	42.4	1.3	38.9	11.8	440,374	42.8
충남	154,750	44.1	1.3	28.3	1.0	52.6	16.8	24,981	54.5

주) 정부지원일자리사업 참여율: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노인 중 비율임(비임금 근로자 제외)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16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율
 - : 일하는 노인의 93.1%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에 종사하여 고용이 불안정함.
 - : 그나마도 임금근로자의 약 43%는 정부지원일자리임.
 - :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4.3명은 직접일자리 참여하고, 5.7명만 일반 노동시장의 일자리 종사하는 것을 뜻함.
 - : 정부지원일 자리를 제외하면 전국 노인의 취업률은 낮아짐.

17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율
 - : 충남은 노인취업률이 높지만(44.1%),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과 고용주는 2.3%로 매우 낮음.
 - :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97.7%로 절대다수임.
 - :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적지만(29.3%), 임금근로자의 54.5%가 정부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자생적 일자리가 적음.
 - * 정부지원일 자리를 제외하면 충남 노인의 취업률은 크게 낮아질 정도로 영향이 큼.

18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및 참여희망비율

- : 정부지원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국 6.7%, 충남은 8.3%로 1.6%p 높음.
- : 충남노인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율은 16.9%로 실제 참여율보다 8.6%p 높음.

[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및 참여희망비율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440,374	42.8	462,672	6.7	1,123,939	16.2
충남	24,981	54.5	29,161	8.3	59,317	16.9

주) 1) 정부지원일자리사업 참여율: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노인 중 비율임(비임금 근로자 제외)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및 희망율: 본인응답자만 분석함.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19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현재와 희망과의 차이

- :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률이 높지만(30.3%), 취업희망율은 35.1%로 더 높음.
- : 충남의 노인취업률은 44.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 또한 근로희망 비율(34.8%)보다도 취업률이 더 높음.

[표] 일하는 노인의 현재와 희망과의 차이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취업률			근로기간(주당)			월평균 임금		
	현재①	희망②	차이 ①-②	현재①	희망②	차이 ①-②	현재①	희망②	차이 ①-②
전국	30.3	35.1	-4.8	29.05	26.46	2.59	76.92	101.55	-24.63
충남	44.1	34.8	9.3	25.56	24.57	0.99	61.97	96.61	-34.64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20



5. 노인의 일자리 특성

- 일하는 노인의 현재 근로조건과 희망하는 일자리와의 차이
 - :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29시간. 충남은 25.6시간으로 적음.
 - :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현재 일하는 시간보다 적음.
 - * 전국 29.1시간, 충남 25.6시간
 - : 임금은 전국평균(76.9만원)보다 충남이 낮음(62만원).
 - : 희망하는 임금과의 격차는 전국은 24.6만원인 반면, 충남은 34.6만원으로 격차가 큼.
 - * 희망임금: 전국 101.6만원, 충남 96.6만원

21



6. 정책방향

- 노인의 다양한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지원정책 필요
 - :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정부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전국 20.5%, 충남 16.1%).
 - : 공공근로보다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세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 고령자의 자영업 진출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지양.
 - *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특성
 - : 낮은 부가가치, 저임금, 임시일자리

22



6. 정책방향

1) 충남 65세 이상 일자리 정책 대상 설정 :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를 반영해서 설정해야 함.

[그림 11] 충청남도 65세 이상 일자리 정책대상 추계

65세 이상 인구	근로능력	근로희망	현재 경제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일자리 정책대상	민간 일자리 정책대상
362,946명	근로능력자 307.4천명	희망자 110.7천명	취업 96.9천명	참여 22.9천명	희망 21.6천명	42.2천명	68.5천명
				미참여 74.1천명	비희망 1.3천명		
		미희망자 196.7천명	미취업 13.7천명	—	희망 11.0천명		
				—	비희망 63.0천명		
			근로능력 부족자 55.5 천명		—		

주) 1) 65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주민등록등록인구임(KOSIS)

2) 근로능력 부족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등급 외 포함)

3) 일자리 희망자는 소득활동 희망자로 추정함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및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가중치 부여, 본인 응답자만 분석).

23



6. 정책방향

1) 정책대상 설정

(1) 정책대상

: 충청남도 65세 이상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0.7천 명으로 추계됨.

(2) 노인일자리 정책대상

: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은 42.2천명으로 추계됨.

: 2017년 기준 29.2천개보다 최소 13.0천개가 더 필요.

(3) 민간일자리 정책대상

: 민간일자리 정책대상은 68.5천명으로 추계됨.

: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게 노인일자리사업보다는 안정된 민간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4

6. 정책방향

3) 노인의 다양한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지원정책 필요

: 소득분위별 취업희망노인의 생애최장기 직종 반영

[표] 소득분위별 취업희망자의 생애 최장기 직종: 전국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장기기계조작	단순노무직
소득 1분위	1.8	2.7	3.9	8.6	11.3	27.5	9.6	8.1	26.5
소득 2분위	2.8	3.8	4.9	8.1	11.0	22.5	13.3	12.1	21.5
소득 3분위	4.0	5.7	7.9	8.6	16.1	14.2	12.2	14.4	16.9
소득 4분위	2.8	11.3	11.5	6.9	8.4	22.7	9.9	14.1	12.2
소득 5분위	12.4	8.6	10.3	4.9	8.8	23.1	13.5	9.2	9.1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25

6. 정책방향

● 소득분위별 취업희망노인의 생애최장기 직종

: 생애최장기 직종이 전문관리직인 비율

* 소득1분위 4.5%, 소득5분위 21.0%로 4.7배 차이

: 생애최장기 직종이 농림어업직·단순노무직인 비율

* 소득1분위 54.0%, 소득5분위 32.2%로 1.7배 차이

⇒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계에 봉착하기 쉬움.

26



6. 정책방향

- 소득분위별 노인의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및 인적 특성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인적자본이 취약함.

[표] 소득분위별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전국

(단위: %, 시간, 만원, 년, 세)

구분	취업희망 여부	취업희망자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인적 특성	
		희망하는 근로시간(주당)	희망임금(월 평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교육 연수	만 연령
소득 1분위	31.5	22.71	69.99	54.2	6.76	72.66
소득 2분위	40.2	30.11	114.19	34.1	7.98	70.43
소득 3분위	39.2	30.06	134.47	34.1	8.68	69.32
소득 4분위	41.0	31.45	144.23	23.6	9.24	69.17
소득 5분위	26.8	32.33	227.35	13.8	10.54	69.47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27



6. 정책방향

- 소득분위별 노인의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및 인적 특성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연령이 높음.

* 소득1분위 평균 연령 73세, 소득5분위 69.5세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음.

* 소득1분위 평균 6.8년, 소득5분위 10.5년

⇒ 저소득자의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인적자본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로 연계하기는 한계가 있음.

28



6. 정책방향

- 소득분위별 취업희망노인의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 일하기 원하는 비율도 소득분위에 따라 다름.

* 소득1분위 31.5%, 소득5분위 26.8%

: 저소득자의 취업욕구가 높은 편임.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높음.

* 소득1분위 54.2%, 소득5분위 13.8%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저소득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 고소득자는
비보조금 일자리 연계

29



6. 정책방향

- 소득분위별 취업희망노인의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김.

* 소득1분위: 22.7시간 소득5분위: 32.3시간

: 희망하는 임금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많음.

* 소득1분위: 70만원 소득5분위: 227.4만원

⇒ 저소득자는 정부지원사업 연계 중심

⇒ 고소득자는 일반 노동시장의 일자리 연계 중심

30



6.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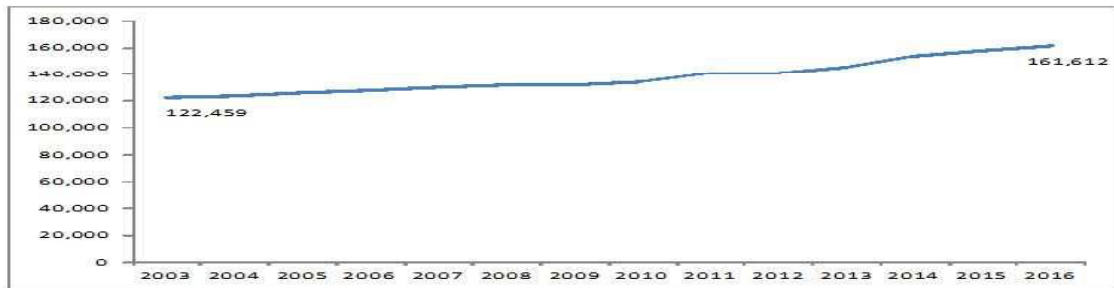
● 충남의 사업체

: 충남의 사업체 수는 전국 사업체의 4.1%에 불과하지만,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5인 이상).

*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 사업체의 42.5%가 위치함.

: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충청남도의 사업체 수(2003~2016년)



자료) 통계청 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함(최종접속일 2018.09.27).

31



6. 정책방향

4)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

: 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급여수준이 66%로 가장 높지만, 건강상태와 맞지 않거나 일의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도 25.2%에 이름.

[표] 소득분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및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시간, 만원, 년, 세)

구분	일의 만족도	불만족하는 이유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일의 내용	대인관계
소득 1분위	2.58	70.5	17.4	4.3	2.6	4.7	0.4
소득 2분위	2.46	63.8	19.8	7.2	2.0	7.2	—
소득 3분위	2.34	45.3	24.4	—	19.6	10.6	—
소득 4분위	2.28	52.9	25.4	—	9.6	12.1	—
소득 5분위	2.18	62.3	28.6	9.1	—	—	—
전체	2.47	65.9	19.2	4.5	4.1	6.0	0.2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32

6. 정책방향

4)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

: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함.

: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짐.

* 소득1분위: 17.4%, 소득5분위: 28.6%

: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역량에 맞는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함.

: 특히, 고소득자와 조만간 진입하게 될 직업적 성취도가 높은 베이비부머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임.

33

6. 정책방향

5)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의 구직경로를 보면, 취업지원센터가 가장 많음(75.4%).

[표] 소득분위별 구직방법(1순위): 전국

(단위: %, 시간, 만원, 년, 세)

구분	취업지원 센터	개인적 인맥	신문잡지 등 검색	이력서 작성 등 컨설팅 참여	직업상담, 일자리 박람회 등 참여	직업교육 훈련참여	기타
소득 1분위	81.8	16.3	.8	.8	.1	—	.2
소득 2분위	63.7	31.2	2.6	—	.7	1.8	—
소득 3분위	64.5	30.4	3.2	1.9	—	—	—
소득 4분위	55.0	39.5	—	—	5.4	—	—
소득 5분위	55.0	31.6	—	—	13.4	—	—
전체	75.4	21.4	1.3	.7	.7	.3	.1

주) 소득활동 희망자로서 구직활동 노력을 하는 노인만 분석함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모수가중치 부여).

34

5)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 그러나 개인적 인맥도 21.4%이고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인맥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 다양한 소득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함.
- : 직업교육훈련을 활용한 비율도 0.3%로 극히 낮음.
- :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5



감사합니다



충남도 독거노인 돌봄 방안

김용현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도 독거노인 돌봄 방안

김용현 책임연구원

2018. 10. 8



목 차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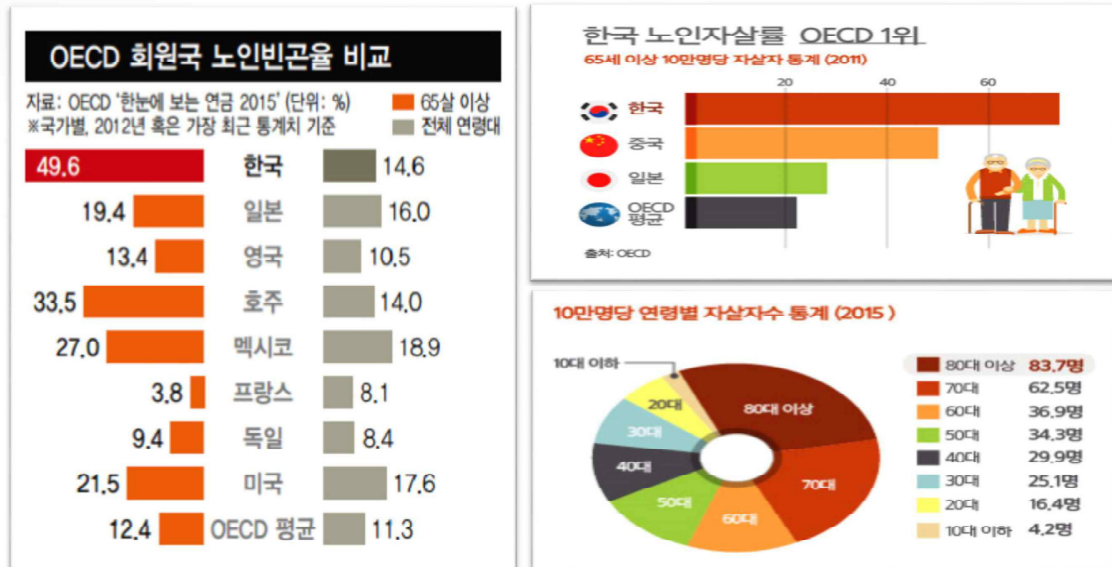
II.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

III.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IV. 충남도 독거노인 정책 제언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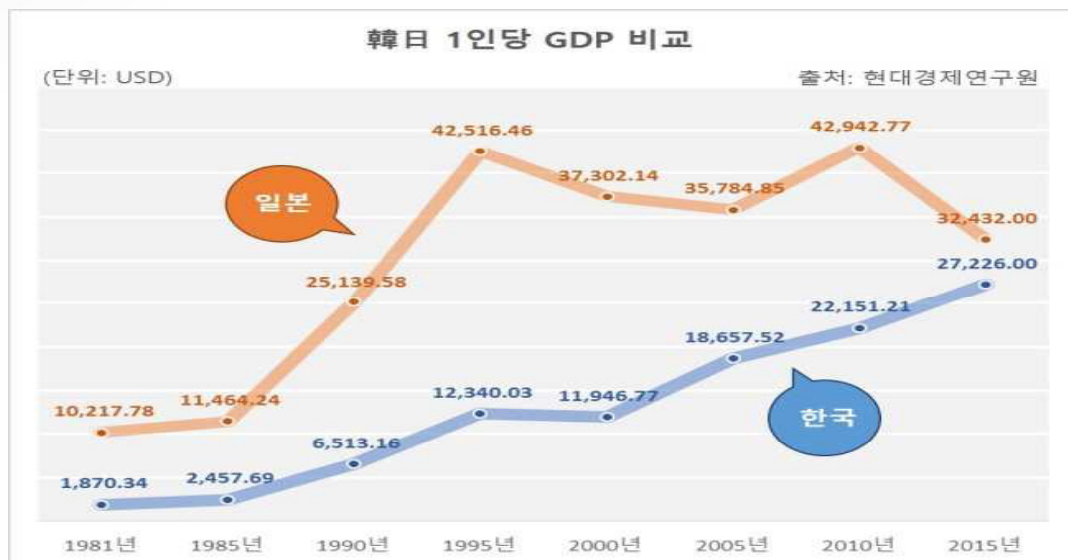
ㄱ 노인자살을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3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ㄱ 한국 노인문제의 심각성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언제 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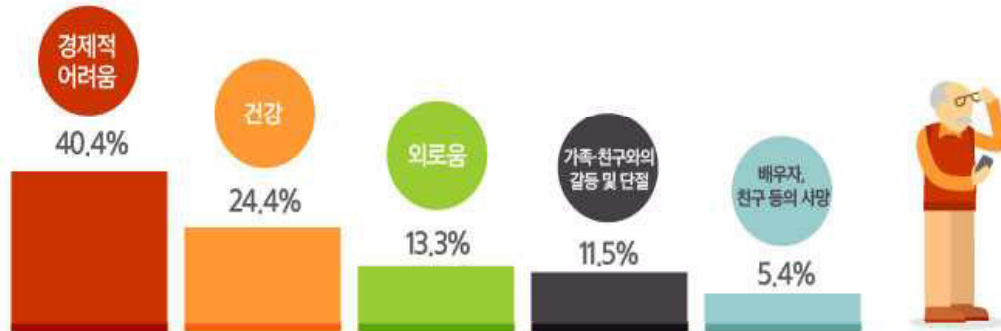
4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 독거노인은 현대 사회의 노인의 대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빈곤, 건강, 우울, 자살, 거동불편 등 문제를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원인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5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 2017년 기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134만 명, 전체 인구의 23.6% 수준
- 4년 전인 2013년 110만6,699명보다 23만2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매년 5만명 이상 급증하는 추세임
 - 이러한 증가는 지속되어 2025년에 225만명, 2035년에는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08년 32.5%→'14년 19.1%→'17년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독거노인 수 변화



자료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체 노인 및 독거노인 증가 추이



6

I.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

- ❏ 충남도 내 독거노인 현황은 2017년 기준, 103,418명으로 2015년도에 비하여 9,652명 더 증가한 만큼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수 362,180명 대비 독거노인 인구 비중 25.4%임

[표] 충남도 독거노인 현황(2017년 6월말 기준)

시군	독거노인 수		
	계	기초생활수급노인	일반노인
계	103,418	90,136	13,282
천안시	14,581	12,266	2,315
공주시	6,944	5,986	958
보령시	6,358	5,287	1,071
아산시	9,053	7,318	1,735
서산시	7,102	5,973	1,129
논산시	8,984	7,719	1,265
계룡시	799	703	96
당진시	7,463	6,879	584
금산군	6,137	5,658	479
부여군	10,081	9,315	766
서천군	5,491	4,864	627
청양군	3,086	2,749	292
홍성군	6,415	5,569	846
예산군	6,040	5,390	650
태안군	4,884	4,415	469

자료: 충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7

II.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

- ❏ 독거 노인 4분의 1이 기초생활수급자임. 독거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7년 34만9,546명(특히 여성이 24만7,892명으로 남성(10만1,654명)의 두 배를 넘음)
- 충남은 전체 독거노인 103,418명 중 90%에 육박하는 90,136명이 수급자임
- ❏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아플 때 간호할 사람이 없는 점 37.2%
-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24.4%
- 경제적 불안감 21.6%
- 일상생활 문제처리 10.1%
- ❏ 독거노인 주된 특성이 여성노인이라는 점과,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나 일상생활능력, 우울 및 외로움으로 정신건강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 독거노인은 일반적으로 자녀동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노인에 비해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수준이 더 열악함
- 혼자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2%로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노인부부(17.0%)에 비하여 매우 낮음(2014년 노인실태 조사결과)

8

Ⅱ.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

- ㉠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식률이 24.0%에 달하고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55.9%이며,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21.6%임
 - 특히 가구형태별 결식률의 차이가 매우 커, 독거노인이 24.0%인 것에 비하여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10.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11.2%에 불과함
- ㉠ 독거노인의 21.6%가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21.9%)과 유사한 수준이나, 노인부부(11.5%)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임
- ㉠ 소외 문제의 경우, 이웃과의 유대에서 가구형태별 차이는 적지만 자녀와의 유대는 독거노인이 매우 낮은 수준임
- ㉠ 사회참여와 관련, 독거노인의 58.6%가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가구형태의 노인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 홀로 죽음을 맞아 방치되는 고독사 역시 독거 노인들의 당면한 문제임.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8,190명. 이중 노인 비율이 3분의 1 이상인 38.4%(3,146명)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무연고 사망자가 1.8배 증가 동안,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2.1배 증가함

9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부 확인)

- ㉠ (목적)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비스 내용)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 확인
 -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보건서비스,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밀반찬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 혹서기·혹한기일 경우,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생활교육 실시 및 기상특보(폭염·한파 등)시 매일 어르신께 연락하여 안부 확인

10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②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안전 확인)

- ㉮ (목적) 혼자 거주시 화재·가스누출·건강 악화 등의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
- ㉮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 댁에 가스누출·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부착하여 위급상황(가스·화재 센서 감지시)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응급상황 대처

③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사회관계 회복)

- ㉮ (목적) 노인 고독사·자살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
- ㉮ (서비스 내용) 노인 특성에 따라 은둔형, 자살 고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등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심리치료, 건강·여가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 추진,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11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④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민·관협력)

- ㉮ (목적) 민간 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강화
- ㉮ (서비스 내용)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 맺고 안부확인·후원물품 등의 서비스 제공
 - (사랑잇는 전화) 콜센터 상담원 등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 등 전달
 - 결식 어르신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위험 있는 독거노인(2.5천명)께 분기별 쌀(20kg 1포)지원
 - 혹서기·혹한기 지원 : 식품키트(즉석밥, 반찬 등), 냉·난방용품(선풍기, 온열매트, 의류) 등 후원물품 제공
- ㉮ (참여기업·기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 총 8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4.9만명의 독거노인 보호

⑤ 노노케어

- ㉮ (목적) 건강한 노인에게는 독거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 노인은 자신과 비롯한 연배의 노인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 (서비스 내용)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말벗위주의 정서적 서비스 제공

12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⑥ 그 외, 관련 서비스

- ㉠ (단기가사서비스) 척추질환·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할 경우, 최대 2달간 식사·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 (대상자)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 ㉡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 대상, 가사서비스 및 요양서비스 제공
- ㉢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독거노인의 집 안에 감지 센서를 설치해 활동, 출입, 화재, 가스유출 여부 등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홀몸노인을 구호하는 시스템. 24시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미래형 맞춤형 복지 체계
- ㉣ (무연고 독거노인 무료 장례지원사업)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을 보내야 하는 아픔을 달래고 고인의 따뜻한 장례를 지원코자 『무연고 독거노인 무료 장례지원 사업』 실시

13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⑦ 독거노인 서비스의 한계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 서비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님
 - 전국적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64만 1,000천명이지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는 24만명에 불과함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현황

(단위: 명)



14

Ⅲ.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현황

⑧ 충남도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현황

- ㉮ 충남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도내 15개 기관으로 554명의 생활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음 (2018년 1월 기준)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인이 25-2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생활관리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은 15000명 정도에 불과함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79개 기관, 896명의 요양보호사 활동, 이는 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함
- ㉮ 노노케어 사업도 2016 10월 기준 충남도 내 수혜노인은 8,396명에 불과
- ㉮ 독거노인 u-care(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16년 기준 약 8만 4천 가구로, 2016년 기준 1인 가구 538만 가구의 약 1.6%, 독거노인 127만 가구의 약 6.6%에 불과함
 - 충남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미 운영지원(홍성군 거점센터)
 - 충남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장비 구축 : 1,500대
- ㉮ 우울증 등 독거노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대응 없음

15

Ⅳ. 충남도 독거노인 정책 제언

①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대상 사회서비스(기본, 종합)는 수혜자가 전체 독거노인에 비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충남도만이라도 생활 관리사를 충원하여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 ㉮ 현재의 복지서비스 수혜과정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 수요자가 복지서비스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임
- ㉮ 그러나, 독거노인들은 정보접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필요함

16

IV. 충남도 독거노인 정책 제언

③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 ㉠ 독거노인의 개별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현재 독거노인과 관련된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U-Care 시스템, 전자바우처 등 구축되어 있으나 분산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④ 우울증 및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 독거노인은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가 일반노인보다 더욱 심각하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
- ㉡ 은퇴한 노인들을 상대로 상담자 자격증 취득 후 가가호호 방문 상담 진행이 필요함

17

IV. 충남도 독거노인 정책 제언

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기준(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독거·취약 가구·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중증장애인)을 낮춰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독거노인 가구의 약 6.6%에 불과함
 - 서산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독거노인 1,680세대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설치
 - 이 시스템은 화재 134건, 가스누출 2건, 응급호출 149건 등 발생했을 때 사고 조기 수습은 물론 신속한 병원 이송 등으로 독거노인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짐

⑥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

- ㉠ 2010년도 부터 충남도는 자연마을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 개보수 하여 독거노인의 공동취사 및 숙박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 상황 지원
 - 2018년 1월 기준, 충남도는 50개소가(이용 328명) 운영중이나 독거노인 5~6명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공동난방 및 공동취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안전 확인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 있는 공간 확대 운영

18

감사합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